

Smile Up KOREA!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

지역이 못아야
나라가 못습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대한민국을 키우는 힘, 지역발전입니다!

Contents

04

위원장 인사말

07

우리의 철학

08

우리의 목표/전략

12

Advance UP KOREA

14

Happy UP KOREA

16

Global UP KOREA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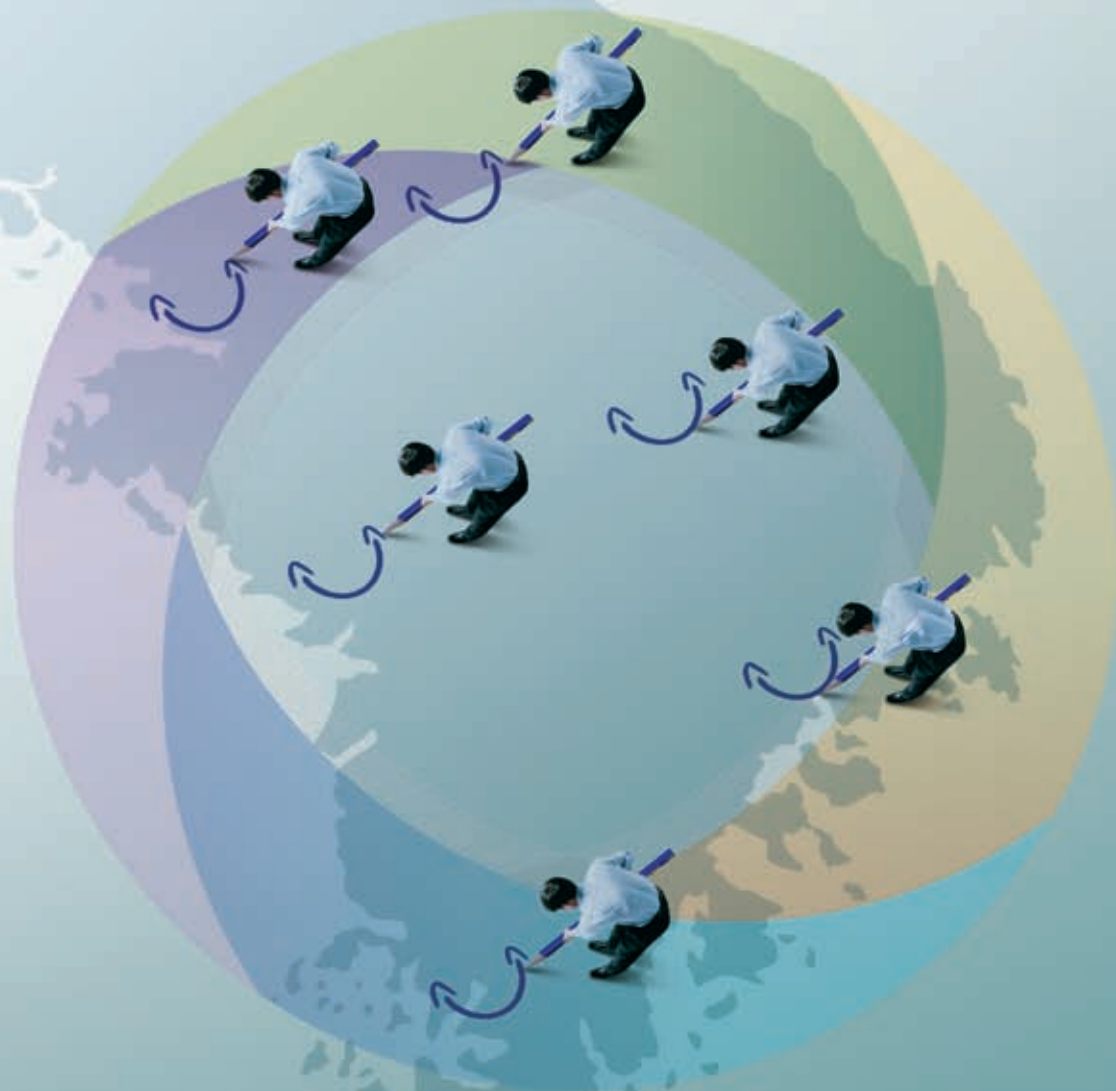
4대강 주변지역개발

24

FAQ

26

위원회 소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세계 최강의 선진국들도 지역경쟁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역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제,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입니다”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상반된 변화 속에서 지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합종연횡과 거대도시 중심의 광역적 지역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에 얽매인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경제를 향한 새로운 지역주의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지역경쟁력·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어떤 나라든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은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하나의 잣대로만 바라보면, 비교의 비극이 생깁니다. 잘사는 지역의 양보와 못사는 지역의 관용이 어울릴 때 상생발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불균형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냉철하고 치밀하게,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우리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지 풍요로운 삶의 질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가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각 지역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함으로써, 전국 방방곡곡이 상생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전국의 모든 지역과 함께 뛰겠습니다.

지역발전 정책을 더 이상 담론이나 슬로건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쟁력은 지역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줄 때 극대화됩니다. 21세기는 지역이 강해야, 나라도 강해집니다. 이제,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최 상 현





A young girl with dark hair and a pink flower in it is smiling and holding a large, colorful pinwheel (blue and yellow) in a green field. In the background, there are several white wind turbines and a city skyline under a clear blue sky.

지역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국민 누구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국민 누구나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
선진 일류국가 – 행복한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Why 우리의 철학

지역경쟁력 = 국가경쟁력

왜 지역발전인가?

전 세계가 <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지역불균형 해소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국가의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간** 키밋추가가 아닌 **세계와 경쟁하는 역동적인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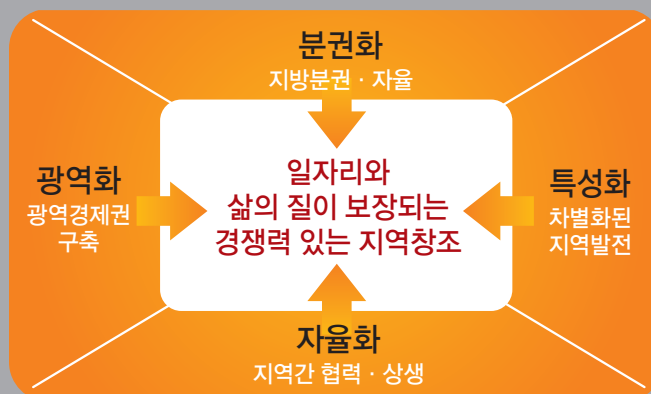
세계와 겨루는 <지역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존 행정구역을 벗어난 **광역화** - 특성화된 **광역경제권**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규모화** · **차별화**로 **지역경쟁력** ·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골고루 잘 사는 <상생 발전>이 요구됩니다.

특정지역으로의 **인구(45%)** - **경제력(53%)** 집중현상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제 **지역갈등** - **국론분열**을 뛰어넘어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구상과 전략





Goal **우리의 목표** 일자리·삶의 질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

광역경제권 구축
 내국적 균형 탈피,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

특성화된 지역발전
 차별화된 지역발전전략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

지방분권·자율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지역 주도의 발전

지역간 협력·상생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간의 발전적 분업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Strategy 우리의 전략

광역화·특성화·분권화·자율화

지역잠재력 극대화!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전 국토의 모든 지역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 단위의 지역 개발

광역경제권 16개 시·도를 7개(5+2)로 묶어 광역경제권 형성 촉진

초광역개발권 열린 국토공간 구현을 위한 4개 초광역권 및 내륙벨트 개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견인

-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의 대표 전략산업 육성
- 전후방 산업 간의 동반 발전을 통해 부가가치 극대화
- 시·도를 넘어 지역 간 연계·협력의 활성화 및 개방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분권강화

- 집행적 성격이 강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 지역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 인·허가권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계획·개발권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 합리화
- 수도권 택지·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방환원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
- 지방의 기업유치와 투자확대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기존 시책 발전·보완

혁신도시

-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

- 자족기능을 조기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조성
- 대학·첨단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토지저가공급 등 인센티브 확대

기업도시

-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자족적 성장거점화
- 주변의 산업단지 등 거점을 연계하는 광역 성장벨트 구축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 분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키 워 드	균 형	발 전 (성장 + 균형)
특 성	지역균형·산술적 균형	지역특화·실질적 지역발전
지원방법	분산지원	선택과 집중지원
지원단위	16개 시·도	광역경제권
해결대상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핵심정책	수도권 규제·분산	5+2 광역경제권

전 국토의 잠재력이
유동하는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잠재력이 극대화 됩니다

01 5+2 광역경제권	12
02 163 기초생활권	14
03 4+α 초광역개발권	16
※ 4대강 주변지역개발	20



밤방곡곡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Advance  KOREA

광역화 · 특성화된 지역경제가 대한민국을 키웁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Happy Up KOREA

대한민국 163개 시·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지역발전정책 02

163 기초생활권



기본방향

전국의 163개 시·군의 복지시설 확충, 문화격차 해소,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중소도시와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한 도·농 통합적 개발을 추진합니다.

추진전략

- ▶ 기초 생활권 유형별 특성화·차별화된 개발 추진
- ▶ 살고 싶은 정주공간의 형성과 삶의 질 향상
- ▶ 낙후 및 소외 지역 특별지원
- ▶ 시·군간 연계 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 ▶ 자율적 지역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세계로 뻗어가는 별진 대한민국



Global  KOREA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가 세계와 거룹니다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지역발전정책 03

4+α 초광역개발권

기본방향

4대 벨트(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남북접경)의
연계 개발과 내륙특화벨트의 개발을 통해
대외개방형의 열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추진전략

- ▶ 초광역 성장동력 육성 및 연계 강조
- ▶ 국내외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
- ▶ 동북아 초국경 개발을 위한 지역간 국제교류·협력추진
- ▶ 초광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지역간 공동발전 추진



대한민국 방방곡곡, 잠재력이 요동칩니다

광역경제권(5+2)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기초생활권(163)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초광역개발권(4+ α)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대한민국

전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단 계	범 위	개발방향	개발방법
광역경제권	5+2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형성 및 경쟁력 제고	지역간 연계협력 발굴·촉진 광역계정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	기초수요(삶의 질) 충족	정주여건 개선, 도농통합적 개발 지역계정 (포괄보조금)
초광역개발권	3대 해안벨트 접경지역벨트 내륙특화벨트	열린 국토 구현	국가주도, 국제적 연계협력 일반회계·민자활용

5+2 광역경제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인구 500만 명 이상)과 강원권,
제주권(인구 500만 명 미만)의
광역별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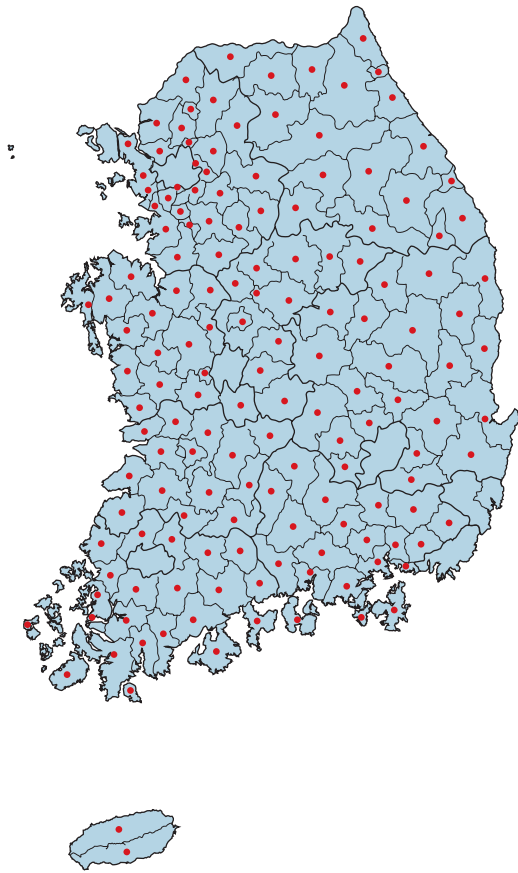
수도권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충청권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호남권 21C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
강원권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 산업의 프론티어
대경권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동남권 한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제주권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 자유도시



163 기초생활권

전국 163개 시·군의
복지시설 확충, 문화격차 해소,
교육제도 개선

도 시 형 광역도시권 개발과 구시가지 정비
도농연계형 중심도시와 농촌지역 간 도농통합적 개발
농산어촌형 인접 시군 간 통합적 연계 개발



4+α 초광역개발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남북접경지역 등 4개 벨트의
연계개발과 내륙축 개발

남북교류접경벨트

생태환경 자원 보존과 남북교류 거점지대로 육성

서해안 신산업벨트

환경해권에 대응하는 차세대 IT, 자동차, 물류 등 산업 육성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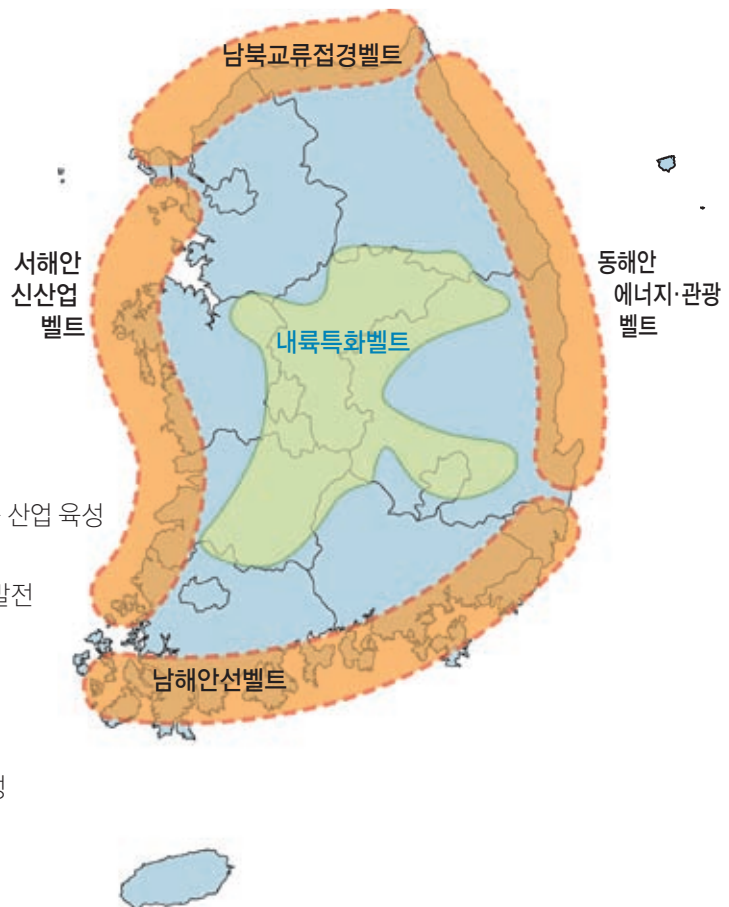
환경해권의 신재생 에너지, 관광레저 거점으로 발전

남해안선벨트

환경평양을 지향하는 기간산업, 물류,
관광여가 중심지로 육성

내륙특화벨트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관광핵심 거점 육성



누구나 어디에서나
활짝 웃는 대한민국

Smile Up KOREA

온 가족이 함께 웃습니다. 대한민국도 웃습니다.



전 국토의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리는

4대강 주변지역개발

기본방향

19만개 일자리, 23조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4대강 살리기’는 자연재해 예방 및 환경보전은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입니다. 4대강 주변지역개발을 통해 녹색한국을 앞당깁니다.

수계별 주요사업 내용

구 분	총사업비(조원)	하천연장(km)	하도정비(백만㎡)	환경정비(백만km)
계	13.9	1,533	219.3	760.2
한 강	2.3	494	10.1	92.9
낙동강	7.6	506	152.7	345.8
금 강	2.4	395	40.6	201.2
영산강	1.6	138	15.9	120.3

추진전략

- ▶ 홍수와 가뭄, 물 부족, 물 오염을 해결하는 **하천복원 프로젝트**
-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환경복원 프로젝트**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발전 프로젝트**
- ▶ 지역관광명소 활성화를 유도하는 **관광발전 프로젝트**
- ▶ 새로운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발전 프로젝트**





지역발전이 나라경제의 희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
세계최고의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
지역발전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

Q. 이명박 정부 지역정책의 기본방향은?

A. 대원칙은 **先지역발전-後수도권 규제합리화**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전국을 7개 (5+2)광역경제권으로 묶는 큰 지방경제를 만듭니다. 둘째, 기업의 토지개발 권한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환경을 바꿉니다.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지방권한과 기능을 키웁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조직·인사권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Q.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추진하는 이유는?

A. 국토전략의 **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30개 광역경제권(인구 800~1,200만명)이 G7을 대체하고, 40개 광역경제권이 경제력(66%), 기술혁신(85%)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이런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도간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MB 정부 지역정책의 핵심전략입니다.

Q.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발표된 주요정책은?

A. 지금까지 **인프라 ⇨ 산업 ⇨ 인력 ⇨ 규제개혁** 관련 지역정책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광역 경제권 권역별 ① 30대 선도프로젝트 ② 선도산업 ③ 거점대학 육성을 시작으로 ④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⑤ 국가균형특별회계 확대개편 ⑥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⑦ 기업의 지방이전촉진 지원 ⑧ 지방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⑨ 산업단지 공급확대 및 노후산단·항만 재정비 ⑩ 수도권 규제합리화 이익의 지방 환원 등이 그것입니다.

FAQ

Q.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은?

A. 현재 규모가 7조6천억 원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기존 200여개 국고 보조금 사업을 20개로 통·폐합해 지자체가 자율·집행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노력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이 전국 평균증가율을 넘어서면, 초과 징수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합리화 개발이익의 지방 환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Q. 과거정부 지역정책과의 차이점은?

A. MB 정부 지역정책의 핵심은 **지역경쟁력=국가경쟁력**입니다. 지역주도-지역특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가 핵심입니다. MB 정부가 지역정책 기초를 불균형 해소에서 경쟁력 향상으로 바꾼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과거정부가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면, MB 정부는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한 **상생발전**입니다.

Q.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합리화의 관계는?

A. MB 정부 지역정책이 수도권 규제합리화로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지역정책=지역발전·수도권정책=글로벌경쟁력을 겨냥한 것으로, 지역정책과 수도권정책은 각각 그 목적을 달리한 새 정부의 국가전략입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지역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아주 불합리 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들만 제한적으로 합리화**하는 조치입니다.

Q. 지역과의 소통강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계획은?

A.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지역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언론사 간담회 개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의 유기적 협약을 통해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16개 시·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MB 정부의 지역정책을 설명하는 정책설명회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연혁과 조직도

History 연혁

5천만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위원회가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 2009 04.0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 위원회 명칭 '지역발전위원회' 변경
- 2008 12.15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발표 (※ 대통령 3차보고)
09.10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발표 (※ 대통령 2차보고)
07.21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발표 (※ 대통령 1차보고)
05.27 최상철 위원장 취임 및 균형발전위원회 본 위원회 구성
- 2007 07.24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안) 심의 및 의결
07.06 제2기 신활력지역 선정(안) 심의 및 의결
04.03 '07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개별이전 사항 등에 대한 처리방안 심의 및 의결
- 2006 11.30 '07년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및 지역혁신발전 시행 계획 수립지침(안) 심의
08.29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안) 심의
- 2005 03.30 부설 [한국지역혁신교육원] 설립 / 정책협의기구 [지역혁신클러스터정책협의회] 설치
01.0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행
- 2004 04.0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법적 기구로 재출범
01.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포

12.1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법률 제7061호)
04.07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 (대통령령 제 17957호)



Organization 조직도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그 날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지역과 함께 뛰겠습니다.

